

보도자료



기획재정부
MINISTRY OF STRATEGY
AND FINANCE

보도일시	2011. 6. 24(금) 배포시		
배포일시	2011. 6. 24(금)	담당부서	예산실 복지예산과
담당과장	방기선(2150-7210)	담당자	박재형 서기관(2150-7211) 정혜경 사무관(2150-7218)

제목 : “건강보험 등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해야...” **-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: 복지 분야 -**

-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(KDI)과 공동으로 학계·언론·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및 정책고객들과 함께 복지분야 중장기 재정운용방향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

* 일시 및 장소: 6.24(금) 10:00~12:00, 서울지방조달청(PPS홀)

- 저출산·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향후 복지분야 재정운용방향과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

- 토론자들은 현재 급속히 진행하고 있는 저출산·고령화 현상이 향후 복지재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하면서

- 보육 등 미래대비 투자 확충, 노인 일자리 사업 등 노후보장체계 강화,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,
-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중장기적 시계에서의 복지정책 수립과 복지예산 운용, 교육·복지·고용 등 부처간 기능 연계노력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음
- 또한, 보육료 자율화와 더불어 국가의 책임성이 강화되어야 하고, 우수 민간보육시설(공공형 보육시설)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

- 특히, 방청 중인 정책고객들은 정책수요자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해
 -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의 인력 확충, 민간서비스와 협력을 통한 사례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였음
-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방안과 관련해서는
 - 고령화 등으로 인해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면서,
 - 중장기적·통합적 관점에서 건강보험 재정운용 방향과 정책을 결정하는 안정화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음
- 아울러 당면한 건강보험 재정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
 - 지불제도 개편, 약제비 인하 등 지출통제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최우선 되어야 하고, 목적세 신설 또는 부담금 확대, 공정한 부과 체계 마련 등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있었으며,
 - 이해관계자가 정책결정자가 되는 현행 보험료 결정시스템의 개편, 보험료 인상, 건강보험의 기금화, 민영보험과의 연계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음

1. 2011~2015 복지분야 재정운용방향 (발제요지)

가. 복지정책의 환경 변화

- (인구·가족구조 변화) 급속한 고령화 진전으로 노인인구 및 1, 2인 가구 비율이 급증하여 향후 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
 - * 노인부양비: ('07) 14.3 → ('50) 72.0%, 유소년부양비: ('07) 24.1 → ('50) 16.8%
- (소득분배구조 악화) 외환위기 이후 빈곤율이 증가하고 중산층은 감소하는 추세가 지속
- (가계지출구조 악화) 저소득층일수록 주거, 의료, 교육, 조세 및 사회 보험료, 이자 등 경직성 지출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증가

나. 복지분야 재정투자방향

☐ 맞춤형 지원을 통한 빈곤정책 대상 확대

- 기초생활보장 등 공공부조 확충 및 비정규직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대상의 표적화 및 수단의 다양화 필요

☐ 복지의 고용친화적 기능 강화

- 일자리 제공은 소득획득의 핵심적 수단인 동시에 사회적 연결망 유지와 사회보장의 제도적 보호를 가능하게 하는 장치
- 특히, 사회서비스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적극적 투자 필요

☐ 복지지출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조정

- 복지사업의 제도적 중복과 수혜대상 집중 해소를 위해 부처간 조정 체계 마련과 민간부문의 특정 서비스 과잉공급 문제 해결 필요

☐ 복지체감도 제고와 지속가능성 조화

- 복지대상 확대에 상응하는 재원마련 방안을 동시에 모색하고, 한정된 재정여건 하에서 재원배분의 우선순위 설정 중요

2.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방안 (발제요지)

가. 재정여건 및 전망

- ☐ '01년 약 13조원이었던 보험급여비가 '10년 약 34조원에 달하는 등 (연평균 약 10.98%) 매년 의료비가 GDP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

- 고령화,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 욕구 증가 등을 감안할 때, '20년 보험재정 규모는 87.4조원에 이를 전망

- ☐ 현행 재정방식으로는 건강보험의 지속성 유지에 한계가 있으며, 재정안정화를 위한 방안 모색 필요

나. 재정운용상 문제점

- ☐ (의료자원 활용 측면) 대형병원 쏠림현상, 과도한 약제비 비중, 의료설비 과잉투자 등으로 자원 활용상 비효율 초래
 - **현행 진료비 지불제도(행위별수가제)**는 의료서비스 과잉공급 및 과다소비의 유인이 있음
- ☐ (재원확보 측면)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만을 부과대상으로 하며,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면제

다. 재정안정을 위한 정책 과제

- ☐ 약제비 지출 합리화, 의료전달체계 및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
 - 질환 중증도별, 의료기관 종별 본인부담율을 차등화하여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고 약제비 관리를 위해 **참조가격제*** 도입
 - * 의약품을 성분·효능별로 분류, 그룹별 기준약가를 산정하여 기준약가의 2배까지만 보험급여를 인정(초과분은 환자본인 부담)
 - **총액예산제, 포괄수가제** 도입 등 검토
 - * (행위별수가제) 개별 진료행위에 대해 진료비 부과 ↔ (포괄수가제) 질병군별로 미리 정해진 진료비 부과
- ☐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 범위 확대, 피부양자 제도 개선
- ☐ 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**자동안정화 장치(Built-in Stabilizer)** 도입
 - **보장성-수가-보험료 수준을 연동**하여 보장성 규모와 수가 수준이 결정되면 보험료 수준이 자동 결정되는 매커니즘 구축

□ 제1주제: '11~'15년 복지분야 재정운용방향

- 사 회 : 안종범 (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교수)
- 발 표 : 강신욱 (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)
- 토 론 : 배병준 (보건복지부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)
 소기홍 (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)
 신성식 (중앙일보 선임기자)
 유태균 (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)
 이순희 (파랑새어린이집 원장)
 이의영 (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)

□ 제2주제: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방안

- 사 회 : 안종범 (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교수)
- 발 표 : 신영석 (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장)
- 토 론 : 고경석 (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)
 김동섭 (조선일보 보건복지전문기자)
 김진현 (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)
 소기홍 (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)
 정기택 (경희대학교 의료경영학과 교수)
 최준욱 (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)